

 금융위원회	<div> <div>  </div> <div>  </div> </div>			
	<b>보도</b>	<b>'21.6.28.(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'21.6.25.(금)</b>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<b>담 당 자</b>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983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심 규 진(044-215-2750)		심 승 미 사무관 (044-215-2755)
	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홍 성 철(044-205-3941)		유 재 민 사무관 (044-205-3949)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서 준 한(044-201-1751)		최 수 연 사무관 (044-201-1760)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권 순 욱(044-200-5420)		양 호 섭 서기관 (044-200-5429)
	산림청 산림정책과장 하 경 수(042-481-4130)		이 주 식 사무관 (042-481-403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중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장 (02-3145-8072)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한 홍 규(02-3145-8160)		위 충 기 팀장 (02-3145-8760)

## 제 목 :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

-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(II),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담보대출의 불합리한 관행 등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
-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·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
- 상호금융업 완충자본 도입방안, 상호금융업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

### 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

□ 6.25일(금),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「2021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」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및 휴면 예·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일시 : '21.6.25(금) 14:00~15:30 / 장소 : 영상
- 참석 :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산림청, 금융감독원, 농·수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중앙회
- 논의안건 : 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 
 ②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·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

## 1.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

- **(건전성 동향)** 상호금융업권 연체율\*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개인 사업자·법인대출\*\*은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\* 연체율(%) : ('16년) 1.24 → ('17년) 1.18 → ('18년) 1.32 → ('19년) 1.71 → ('20년) 1.54  
고정이하여신비율(%) : ('16년) 1.38→('17년) 1.32→('18년) 1.52→('19년) 2.04→('20년) 2.02

\*\* 개인사업자 대출(조원) : ('18말) 58.2 → ('19말) **67.8** → ('20말) **83.5**  
법 인 대출(조원) : ('18말) 37.2 → ('19말) **46.0** → ('20말) **62.3**

-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\*('20년말 15.6조원)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\* 연도별 증가율(%) : ('16년) 44.0 → ('17년) 26.4 → ('18년) 13.3 → ('19년) 17.2 → ('20년) 37.1  
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(%) : ('18년) 1.99 → ('19년) 2.72 → ('20년) 2.33

- **(대출규제 개선)**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,

-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

### < 대출규제 개선 주요 논의사항 >

- ① **(임직원 대출 관리강화)**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(비상임임원 포함)를 명확화

\* (현행) 임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,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

- ② **(농지담보대출절차 강화)**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하여 강화된 심사절차 및 사후 점검을 실행

\* (현행)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대출은 여신적정성심사 및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 다수  
※ 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은 해당 사항 없음

- ③ **(농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)**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(대출기간 중 중도해지)에 추가

\* (현행)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연장하는 사례 존재

- ④ **(임직원 셀프대출 방지)**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 및 동 기준에 '임직원 셀프대출 제한'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

\* (현행) 임직원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내규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

**⑤ (공동대출 한도 신설) 공동대출 모범규준('14.10월~)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정 중 일부를 법규화\***

\* 공동대출 정의(동일채무자 및 동일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·취급하는 담보대출) 및 공동대출 한도(총 대출의 20% 이내)

□ **(규제차이 해소)**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2단계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**< 규제차이 해소 주요 논의사항 >**

**① (동일인 여신한도)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원에서 25억원\*으로 개인한도 축소(총자산기준은 현행(7억) 유지)**

\* (현행)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,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

**< 동일인 여신한도 개선(안) >**

구 분	현 행	개선안
기본한도	·Max [자기자본 20%, 자산총액 1%(최대 7억원)]	·Max [자기자본 20%, 자산총액 1%(최대 7억원)]
차주별 여신한도	·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: <b>50억원*</b>	· <b>개인: 25억원</b> ·개인사업자·법인: <b>50억원*</b>

\* 법인 (준)조합원은 100억원(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만 적용)

**② (외부회계감사)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(매년)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**

\* (현행)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 및 주기가 제각각인 상황

**<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 >**

구 분	외부 회계감사 대상	감사 주기
농 협	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 - 500억원 미만이지만 대의원 1/3 청구	4년
수 협	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	2년
산림조합	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 ②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% 미만인 조합	2년
신 협	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	매년
새마을금고	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금고	2년

**③ (구조조정) 신탁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·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·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**

\* (현행) 신탁조합이 재무관리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앙회장은 개선요구만 반복 부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은 상황

○ 참고로, 규제차이 1단계 해소 방안은 작년 말 상호금융정책 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.

## <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주요내용 >

### 1.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강화

- ① (거액여신한도 규제 도입) 거액여신을 Max[자기자본 10%, 총자산 0.5%]로 정의하고, Max[자기자본 5배, 총자산 25%]로 한도를 설정
- ② (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)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,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% 이하,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% 이하로 제한

### 2.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하는 규제 도입

### 3. 신탁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

### 4. 조합원 배당 합리화를 위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

## 2.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·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

- (추진배경)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·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\*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휴면 예·적금 986억원, 장기미거래 예·적금 약 1.3조원('20년말)  
미지급 출자금 1,274억원, 미지급 배당금 1,195억원('21년 3월말)

- (캠페인 내용) 소관부처·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, ①휴면 예·적금 등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②컴퓨터·모바일 앱,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·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(8월~10월)하겠습니다.

## 3. 상호금융권 완충자본 도입방안

- (검토배경)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,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\*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\* (은행예시) BIS기준비율(8%) + 자본보전(2.5%) = 10.5%  
은행은 경영지도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, 이익배당의 제한, 유동성 높은 자산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가능(은행법§34)

- (개선방안)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\*이 적기시정조치 기준\*\*에 일정비율을 가산\*\*\*한 범위에 있는 경우,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 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.

\* 순자본비율 = 
$$\frac{\text{총자산} - \text{총부채} - \text{출자금} + \text{후순위차입금} + \text{대손충당금}}{\text{총자산} + \text{대손충당금}} \times 100$$

\*\* 적기시정조치 기준(순자본비율) : (신탁·수협·산림) 2%, (농협) 5%

\*\*\* (예) 직전연도말 총자산 기준 1조원 이상: 2%p, 1조원 미만: 1%p

#### 4.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

- **(검토배경)** 은행·보험처럼 제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\*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\*\*하였습니다.

\* 한도성 여신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

\*\* 금융위가 발표한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(4.29) 후속조치

- **(개선방안)**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,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 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.

### 3

#### 향후 계획

- 8월말까지,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·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
  -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(9월 중 입법예고 예정)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